

미국이 요구한 일본의 비관세장벽

- 미국은 일본의 TPP 협상 참가를 계기로 일본의 자동차 분야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여, 美日간 협의하기로 합의
- 구미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소가 초점이 되고 있음

□ 비관세장벽에 대한 美日간 협의

- 미국과 일본은 13년 4월 12일, TPP 협상과 별개로 비관세장벽과 자동차분야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
 - 美통상대표부(USTR) 커크(Kirk)장관은 4월 1일, ‘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’를 의회에 제출하면서,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
 -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

□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

- 미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민영화된 일본우편주식회사 산하의 간포생명보험과 외자생명보험의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보,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권의 보호 강화 등 9개 항목을 제시

	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	TPP 협상에서 일본의 과제
항목	요구 내용	요구 내용
① 보험	간포생명과 외자생명보험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	
② 투명성	민간으로부터 의견 공모, 절차 개선	
③ 투자	사외 이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본에서 M&A 추진을 용이	해외투자자의 보호, 분쟁 해결 시스템
④ 지재권	저작권 등 지재권의 보호 강화	해적판과 모조품 대책 강화
⑤ 규제의 기준	국제기준에 맞게 규제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	무역·투자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규제의 완화·남발방지
⑥ 정부 조달	입찰 절차를 개선하여 담합 방지	공공사업 분야에 외국 기업 진입의 용이
⑦ 경쟁 정책	조사·결정의 모든 과정의 공정성 확보	카르텔 등의 방지로 제도의 조화를 지향
⑧ 속달 우편	일본우편주식회사의 EMS(국제속달우편)과 외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	
⑨ 검역	식품첨가물의 리스크 평가 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	식품 안전 기준의 투명성 향상

(1)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

-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이미 제로이지만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인 안전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어렵다고 주장
 - 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 도입의 인정이 불투명하다는 점, 기준이나 규제의 책정 시 업계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, 판매점이나 네트워크 등 유통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점 등을 지적
 -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깜박등이 빨강색이라도 상관없으나, 일본에서는 주황색으로 해야 하는 안전 기준 때문에 미국차를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깜박등을 교환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됨
 - 일본의 자체 규격인 輕자동차의 낮은 세금은 대형차가 많은 미국차는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

- 지금까지 일본은 기본적으로 비관세장벽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해 왔지만, TPP 협상 참가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결정

(2) 지재권 보호

- 지재권에 대해서 미국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
 - 이는 미국이 신개발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목적으로, TPP 협상 참가국 중에는 특허기간이 빨리 종료되면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득 때문에 지재권 보호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국가도 있음

(3) 기타

- 일본이 인정한 첨가물은 약 800종류(미국은 3000종류)로 일본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면 미국 식품회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역 분야에서는 일본의 식품첨가물의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
-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규제에 대해, 일본은 2월부터 수입 대상 소를 월령 ‘20개월 이하’에서 ‘30개월 이하’로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은 “시장개방을 위한 중요한 첫 발” 내딛었다고 평가

□ 일본의 TPP 협상의 과제

- 동남아에서는 각국 특유의 제도나 규제가 해외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음
 - 베트남에서는 해외 소매업 기업의 진출을 규제, 말레이시아에서는 자국민을 우대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에 신중하게

대응하고 있는 등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나 철폐가 협의될 전망

- 정부조달에서는 정부에 의한 공공사업의 발주 룰에 대해 공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미국에서는 발주처로서 국내기업을 우대하는 州정부가 많지만, 이 분야에서 내외 무차별의 룰이 생기면 철도나 항만 등의 인프라 수출에서 일본기업이 진입하기 용이해질 것임
- 일본은 일본제품의 해적판이나 모조품으로 인해 일본기업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재권 강화를 요구할 방침

□ 시사점

- 일본은 최근에 협상을 개시한 日-EU EPA에서도 EU 측으로부터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무역통상 협상의 초점이 ‘관세의 성역(예외) 철폐’ 에서 ‘비관세장벽 철폐’ 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
- USTR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강조하여 서비스 장벽이나 반경쟁적 관행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
 - 일본과 다른 점은 ‘산업보조금 정책’ 에 관해 언급한 점과 한국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유기업의 민영화 동향을 감시하겠다고 밝힘
- 우리나라는 미국 및 EU의 비관세장벽의 철폐·삭감 요구에 대해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對일, 對세계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3.3.18/20, 4.3/12/18), 마이니치신문(2013.3.16.), 연합뉴스(2013.4.2)